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10. 19. (월요일)

분쟁 이후 평화 정착 논의…국제 지원의 책임 분담 강조

- "지원 종료는 평화의 완성이 아닌 자립 역량으로 판단해야" -



제4회 HLMUN 2차 비공식-비공식회의 (사진=hlmun press)

제4회 한림대학교 모의유엔총회(HLMUN) 2차 비공식 회의에서 각국 대사단은 분쟁 이후 평화 정착과 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수원국의 주도성과 공정한 역할 분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4일 오후 19시 공학관 1층 1163호에서 제4회 HLMUN 2차 비공식 회의가 열렸다. 제4회 HLMUN 의제는 '분쟁 이후 평화 정착과 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 지원과 비용·역할 분담'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10개 대사단이 분쟁 이후 재건을 위한 국제 지원의 방향과 지원 종료 기준, 국가별 책임 분담 방안 등을 중심으로 입장을 제시했다.

네덜란드 대사단은 분쟁 이후 재건이 건물 복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지원, 교육 및 생계 회복을 아우르는 사람 중심의 평화 구축을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과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현지 주도성을 존중하는 한편 예측 가능한 장기 재정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대사단은 물리적 복구와 함께 교육 및 사회통합을 추진해 장기적인 정치적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금의 투명한 관리와 성과 평가를 강조하며, 지원 종료 여부는 단기적인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제도적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르완다 대사단은 국제 지원을 활용하되 수원국이 스스로 재건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패 방지와 주민 참여, 디지털 행정 등을 통해 국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재정 지원뿐 아니라 평화유지군 파견과 현장 안보 기여 역시 국제사회의 책임 분담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대사단은 지원 조건을 공여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수원국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기에는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하고, 안정화 단계부터 책임성과 제도 개혁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는 단계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지원이 축소되더라도 학교와 보건소 등 필수 공공서비스는 유지해야 하며, 지원 종료 이후에도 정치적 관여와 후속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대사단은 국민의 안전과 존엄, 기본적인 생활을 평화 구축의 중심에 두는 인간 안보를 강조했다. 필수 공공서비스에는 무상 지원을 우선하고,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는 적절한 금융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또한 전직 전투원뿐 아니라 분쟁 피해 주민과 난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 종료는 선거 실시나 국제 임무의 종료 여부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운영 능력과 재정 자립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롬비아 대사단은 토지 분배만으로는 분쟁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농촌 인프라와 금융 접근성, 안전, 시장 접근을 함께 개선하는 농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분쟁 피해가 큰 지역의 주민들이 재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직 전투원과 피해자, 난민, 지역 주민이 함께 혜택을 받는 통합 지원을 강조하며, 필수 서비스에는 무상 원조를, 상환 능력이 있는 생산적 투자에는 양허성 차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라이베리아 대사단은 유엔 평화유지 임무의 종료가 곧 평화 구축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원 종료 여부는 국가의 제도적 역량과 지역사회 회복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초기에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확대하되 이후 국가 역량이 성장함에 따라 민간투자와 국내 재원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모로코 대사단은 수원국의 주권과 공여국의 투명성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기구 간 지원 중복과 공백을 줄이고 공동기금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며, 평화유지 임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실질적인 자립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원을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브라질 대사단은 수원국의 정책 자율성을 보장하고 외부의 일방적인 조건 부과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지역사회가 재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국제사회는 이에 필요한 재정과 기술을 지원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또한 국제기구가 국내 기관의 역할을 장기간 대체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기능 이관을 준비해 수원국의 자립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라크 대사단은 전력과 학교, 병원 등 기반시설의 복구뿐 아니라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원을 통해 현지 정

부의 행정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지원 종료 여부는 공공서비스의 안정성, 정부의 운영 능력, 주민의 생계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제4회 HLMUN은 오는 11월 4일과 11일 두 차례 비공식 회의를 진행한 후, 11월 18일 공식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제4회 HLMUN PRESS팀	팀장	총괄	최다인
	팀원	기사 작성 및 번역	송윤진
한림대학교 총학생회 hallym40th_chanlan@naver.com			
한림대학교 제4회 모의유엔협회 hallymmun@gmail.com			